

하남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890
----------	------

발의년월일 : 2019. 08. .

발 의 자 : 김낙주 의원 (인)

1. 제안이유

- 2000. 4. 6. 조례제정 후 오랜 기간 정비가 되지 않아, 용어의 정의에 보행자와 보행보조용 의자 차(유모차 및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 통행을 위한 장소 ‘보행자 길’을 명시하고
- 시장의 기본책무, 보행환경 조성 기준 정비 및 보행안전문화 확산 등 규정을 신설하여 보행약자에 대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장소 “보행자 길” 정의 신설(안 제2조 제4호)
- 나. 보행안전문화 활성화 등 기본책무 신설(안 제3조 제5호 내지 제8호)
- 다.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 사용주의 규정 신설(안 제4조 제4항)
- 라. 보행환경 조성기준의 설정 규정 신설(안 제6조 제2항 및 제3항)
- 마. 보행안전문화 확산 및 보행약자의 보행여건 개선 규정 신설(안 제7조 ~ 안 제8조)
- 바. 개인, 단체 및 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규정 신설(안 제 9조)

3. 제정조례안 : 덧붙임

4. 관계법령 발취서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7조
- 「의료기기법」 제19조

5. 예산수반 사항 : 해당없음

6. 입법예고 결과

가. 입법예고기간 : 2019년 8월 5일 ~ 8월 15일(10일간)

나. 의견내용 : 의견없음

7.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

하남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하남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하남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보행환경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토록 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행권“이라 함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라 함은 보행자의 보행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감각적, 정신적측면과 이에 관련된 제도 등을 포함한 총체적인 환경을 말한다.
3. “보행약자“라 함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 노인,장애인, 임산부 등의 사람을 말한다.
4. “보행자길”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통행을 위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기본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하고,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책무를 수행한다.

1.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2. 보행환경시설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4.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시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8조에 따른 보행우선구역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사항
6. 보행자길에서의 통행 불편사례 및 개선 의견 접수 등 보행안전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보행권의 확보와 보행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시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 ② 모든 시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 ③ 모든 시민은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보행 중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④ 모든 주민은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
사용에 주의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매 5년마다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
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보행환경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행환경 개선목표 및 시책방향
 2. 보행환경 여건의 변화와 전망
 3. 보행환경 개선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 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5. 기타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 ③ 시장은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한다.
- ④ 시장은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조성기준의 설정) ① 시장은 보행환경을 조성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보행환경 조성 기준을 설정하여야 하고 관련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시설의 운영·관리 등에 적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1. 보행자길의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하남시 어린이 통학로交通安全을 위한 조례」에 따른 어린이 통학로 및 학교 주변 통행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4. 하남시 관내에 위치한 「도로법」 제8조의 도로 중 보도가 없는 도로에 대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다만, 자동차전용도로는 제외한다.
 5. 차량과 보행자 통행이 함께 이루어지는 터널, 교량, 다리 등의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6. 관광지 및 상가 밀집 도로 등 보행자 통행이 많은 구역의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7. 대중교통과 연계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8. 차 없는 거리의 구성에 관한 사항
 9. 넓은 교차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보도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금연환경 구성에 관한 사항
 11. 원도심지, 낙후지역 등의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12. 그 밖의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구체적인 보행환경 조성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보행안전문화 확산) 시장은 보행자의 의식함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행안전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보행 중 휴대기기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4.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행자 의식개선 및 보행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보행약자의 보행여건 개선) 시장은 보행약자의 통행과 활동이 가능하도록 보행여건의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제 구축) 시장은 보행안전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단체 및 기관 간에 유기적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이 체계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민간활동 장려 등) 시장은 보행안전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법인 또는 단체의 활동을 장려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재정) 시장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자길”이란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을 위한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

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길가장자리구역

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횡단보도(이하 “횡단보도”라 한다)

라. 「도로교통법」 제2조제3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마.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바. 「항만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항만친수시설 중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사. 지하보도, 육교, 그 밖의 도로횡단시설

아. 그 밖에 통학로,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골목길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임산부, 어린이, 장애를 입은 사람 등 스스로의 힘으로는 보행이 불편한 사람이 차별 없이 보행자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등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8조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계획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에 따른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보행 관련 계획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연도별 사업추진 및 필요한 자원 조달 계획
3.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보수 및 성능 개선
4.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및 적치물 등의 정비
5. 보행자길 신설, 단절된 보행자길의 연결 등 보행자길 조성
6.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의식 함양 및 홍보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과 그 인근 지역의 보행환경 정비
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나.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
8.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자치구의 구청장 및 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시장 또는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등은 기본계획에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⑤ 특별시장등은 기본계획을 입안하였을 때에는 그 기본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기본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안을 제출받으면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8조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계획,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에 따른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교통·보행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및 통합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거나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 또는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장등에게 기본계획안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⑦ 특별시장등은 제6항에 따른 요청이 없으면 제5항에 따라 제출한 기본계획을, 제6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받은 사항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특별시장등은 계획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기본계획에 포함된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⑨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보행보조용 의자차의 범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란 「의료기기법」 제1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료기기의 기준규격에 맞는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를 말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8조(보행우선구역의 지정) ① 시장이나 군수는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로의 일정 구간을 보행우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이나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행우선구역을 지정하려면 보행우선구역의 지정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지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지정계획에는 해당 보행우선구역의 위치·면적,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시장이나 군수는 지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해당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정계획을 확정·고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이나 군수는 지정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제4항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이하 이 조에서 “보행우선구역 지정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⑥ 보행우선구역의 지정기준, 의견청취 절차, 보행우선구역지정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국가는 시장 또는 군수가 지정계획을 수립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행우선구역 정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의료기기법

제19조(기준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료기기의 품질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그 적용범위, 형상 또는 구조, 시험규격, 기재사항 등을 기준규격으로 정할 수 있다.